

광주·전남 사립대 경영 실태

대학 4곳 법인 전입금 없이 운영

부채비율 두자릿수 대학도 2곳이나 돼 재무보다 교육투자 부문 학교간 격차 커

23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공개한 '국내 188개 사립대학 2006년 결산경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사립대 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무 부문보다는 교육투자 부문에서 학교 간 차이가 컸다.

광주·전남 대학 중 재무 부문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조선대로 47.39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34.22점을 받은 광주여대였다. 점수차는 13.17점. 그러나 교육투자 부문에서는 광주대 59.67점, 초당대 32.32점으로 차이가 27.35점에 달했다.

조선대의 경우 2005년 대비 총자산증가율이 107.8%로 광주·전남 사립대 중 가장 높았고, 총자산회전을 42%, 부채비율 3.2%, 법인전입금 구성비율 1.8%, 기부보조금구성비율 20.8% 등으로 전반적인 재무 경영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불대는 운영수익 294억원 중 법인전입금이 890만원에 불과해 법인전입금구성비율이 극히 미미했고, 광주여대는 174억원 중 1천만원

으로 0.1%, 호남대는 594억원 중 1억 3천만원으로 0.2%에 불과했다. 초당대의 경우 기부보조금 구성비율이 311억원 중 1.7%인 5억원에 그쳤다. 동신대와 남부대는 부채비율이 각각 11.1%, 17.3%로 두자릿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투자 부문에서 가장 좋은 점수

를 받은 광주대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225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105만6천원인 광주여대와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학생 교육비도 광주대가 1천 579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신대 860만원, 조선대 803만7천원 등 순이

었다. 등록금 환원율은 동신대가 145%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대(133.7%), 호남대(132.2%), 조선대(127.5%) 등 순이었다.

편제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나눈 비율을 뜻하는 학생등록률은 조선대가 94.8%로 가장 높았고, 호남대 75%, 동신대 70.1%, 초당대 65.5%, 대불대 64.2%, 광주여대 50.6%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대는 37.9%였다.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광주대가 14명으로 가장 적었고, 남부대 23명, 동신대 27명, 호남대 32명, 대불대 40명, 조선대 41명, 광주여대 43명 등 순이었다. 전임교원의 강의당당 비율

은 조선대가 76.7%로 가장 높았고, 호남대 73.4%, 광주대 71%, 남부대 66.2%, 광주여대 64%, 초당대 63.7%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수 1인당 연구비는 3천894만원으로 조선대가 가장 많았고, 최하위권인 초당대(544만9천원)와는 3천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신대 3천48만8천원, 호남대 2천186만9천원, 광주대 1천322만 7천원 등이었다. 교육기부시설 확보율은 남부대, 광주대가 153%, 150.7%로 높았고, 조선대, 대불대가 81.8%, 95%로 낮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강기정·박지원·김성근·박주선·주승용·최인기·김영록·이용섭·조영택 의원(사진 왼쪽부터).

“李 대통령에 광역경제권 철회 요구”

정세균 대표, 영수회담 때 호남 발전 구체적 대책도 주문

회담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국회 1층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국가자원의 배분원칙에도 맞

지 않는 졸속 개발계획으로 330만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역경제권 계획에서 영남은 2개 경제권으로 배분됐으나 호남은 1개 경제권에 그쳤으며 선진국들은 국가자원의 배분원칙에도 맞

지 않는 졸속 개발계획으로 330만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역경제권 계획에서 영남은 2개 경제권으로 배분됐으나 호남은 1개 경제권에 그쳤으며 선진국들은 국가자원의 배분원칙에도 맞

이들은 또한,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철회에 나서지 않을 경우, 충청권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서 한편, 국회 상임위와 예산 심의에서 광역경제권 관련 법안과 예산 등을 연계 처리하는 실행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소속의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대단위 사업을 변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지적하며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 체계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기업·인구 쏠림 가속 비수도권 '산업 공동화' 초래

■ 수도권 규제 완화 반발 확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는 공장총량 규제를 풀고 대규모 주택과 산단의 조성 가능성도 높여 군사 제한 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도권을 집중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사실상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와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본격화=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경제적 불평등을 격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해 다각적인 수도권 육성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추진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쏠림 현상과 산업의 편중을 제한해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대표적인 규제인 공장 신·증설 억제제는 기업유치에 매진해온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들에게 적잖은 도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법안 개정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혀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골자는 서울 근교에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100km 안팎을 해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5일 규제완화 종합대책 발표에서 대기업 및 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적지 않은 부분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 반발=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지방을 고사시키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제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선 지역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진기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기업유치를 포기하라는 조치와 다름없다”며 “정부가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은 경제낙후 심화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수도권은 인구·경제력 집중으로 비대해져 활력을 잃게 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멸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협의체' 논의

광주, 전남·북 관계관 회의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호남권'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호남권 광역경제권 구성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북도 정책기획관들은 23일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호남권 관계관 회의'를 갖고 가칭 '호남권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 인력편성 등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각 시·도의 최종 입장을 조율해 협의체를 발족키로 했다. 협의체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구로 구성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